

일본 참의원 선거의 평가와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 전망

김은지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Tel: 02-3460-1035)

서영경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원 (yksuh@kiep.go.kr, Tel: 02-3460-1236)



차 례 ●●●

1. 2013년 참의원 선거 결과
2. 선거 쟁점별 현안 분석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 지난 7월 21일 실시된 제23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과 민주당의 참패, 그리고 자민·공명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요약됨.
 - 자민당은 2012년 12월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여 ‘자민당 1당 시대’를 부활시킴.
 - 이로써 연립여당이 참의원에서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상이하여 법안 성립이 어려운 상태(이른바, ‘뒤틀린 국회’)가 해소됨.
 - 제2기 아베 내각은 향후 3년간 국정 선거가 중의원 해산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 이후 최초로 장기 집권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정권운영의 구심력을 강화하게 되었고, 향후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 운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금융완화정책)** 아베 정부의 강력한 디플레이션 탈피 의지에 따라 일본 은행이 강도 높은 금융완화정책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엔화 약세 및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일본 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성장전략)** 지난 6월에 발표된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강구됨에 따라 이번 성장전략의 실행 가능성은 이전보다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아베 총리는 이번 가을에 법인세 감면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2차 성장전략’을 구상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고용 관련 규제완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보임.
 - **(재정건전화)**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내년도 소비세율 인상과 사회보장비용 감축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연기될 경우, 재정건전화에 대한 개혁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일본정부는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해 오는 8월에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후 10월에 소비세 증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임.
 - **(TPP 전략)** 일본정부가 7월 23일 제18차 TPP 협상에 처음 참가하는 등 TPP 협상이 향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일본의 TPP 협상에 따른 영향과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원전 정책)** 원전 재가동 방침과 관련하여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가동을 찬성하는 입장인바, 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원자로의 가동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음.

1. 2013년 참의원 선거 결과

가. 선거 결과

- 7월 21일 실시된 제23회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압승, 민주당의 참패에 따른 연립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로 요약됨.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총 정원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이 새롭게 선출되었는데,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63석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각각 65석과 11석의 개선(改選) 의석을 차지하여, 여당 과반수 필요 의석 수(63석)를 크게 상회하는 76석을 획득함.
- 그 결과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상이하여 법안 성립이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되었고, 연립여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 수를 확보하게 되었음.
- 민주당은 개선 의석 수 44석 중 17석을 차지하는 데 그쳐 1998년 창당 이래 과거 최저치를 기록하며 참패함.
- 군소정당 중 다함께당, 공산당, 일본유신회는 모두 8석의 개선 의석 수를 차지하며 선거 후 입지를 강화함.

표 1. 참의원 선거 이후 정당별 의석 수의 변화

	개선 의석 수	개선의석의 획득 의석수			비개선 의석 수	선거 전과 선거 후 의석 수 변화
		선거구	비례대표	획득 의석 수		
자민당	34	47	18	65	50	84 → 115
민주당	44	10	7	17	42	86 → 59
공명당	10	4	7	11	9	19 → 20
다함께당	3	4	4	8	10	13 → 18
공산당	3	3	5	8	3	6 → 11
일본유신회	2	2	6	8	1	3 → 9
사민당	2	0	1	1	2	4 → 3
생활당	6	0	0	0	2	8 → 2
개혁당	1	0	0	0	1	2 → 1
녹색바람당	4	0	0	0	0	4 → 0
기타	2	1	0	1	0	2 → 1
무소속	5	2	0	2	1	6 → 3
합계	121(결원 5)	73	48	121	121	242

주: 1) 참의원은 6년 임기로 3년마다 절반(121명)씩 선출됨. 개선(改選) 의석 수는 임기만료로 새로 선출되는 의원 수를 말함.
 2) 기타는 무소속과 달리 일본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근거하여 지정된 정당요건(국회의원 5명 이상 소속 또는 최근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의 득표율 2%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각 언론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선거 의의

-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과 아베노믹스의 안정적 시행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부각됨.
 -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강한 일본’ 을 내걸고 그간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점과 앞으로도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바꿀 것임을 강조한 경제정책 방향이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경제신문사가 7월 14~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정책 가운데 ‘경기회복’ (32%)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보장’ (23%), ‘소비세 등 세제개혁’ (13%), ‘동일본대지진 부흥’ (6%)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에너지정책’, ‘외교 안전보장’, ‘헌법개정’ 등은 5%를 기록하며 쟁점화되지 않음.
 -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어 양원의 의사가 일치되어야만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이번 선거 결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다른 상태가 해소되면서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성립됨.
 -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 12월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총 325석을 차지하여 참의원에서도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중의원에서도 단독으로 법안 재가결이 가능한 2/3 의석 수(320석)를 확보한 상황임.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연립여당은 과반수의 의석(135석)을 차지하며 6년 만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여대야소’ 의 안정적 구도를 확보함.
 - 제2기 아베 내각은 향후 3년간 국정 선거가 중의원 해산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 이후 최초로 장기 집권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짐.¹⁾
 -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정권(2001. 4. 26~2006. 9. 26) 이후 6년 동안 평균 1년의 단명 정권이 계속됨.
 - 2012년 12월 등장한 아베 총리는 고이즈미 이후 일곱 번째 총리임.
 - 일본 기업경영자들은 지금까지 정치의 연속성에 대한 불안이 컸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왔으나, 이번 선거 결과로 아베노믹스의 지속성에 강한 기대를 보이고 있음.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을 가속화하는 한편, 헌법 개정 등의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개헌에 적극적인 자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3당을 기준으로 헌법 개정발의에 필요한 2/3 이상인 162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
 - 일본 헌법 96조에 따르면,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총 의원의 2/3 이상 찬성을 얻어 개정을 발의하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로 과반수가 찬성해야 승인된다” 라고 규정됨.
 - 아베 총리는 헌법 96조를 개정하여 양원 2/3 이상의 발의요건을 1/2 이상으로 개정하되, ‘평화주의, 기본인권, 국민주권 조항’ 의 경우에만 발의요건을 2/3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포함하여 논의하자고 주장해 왔음.

1) 高田創(2013. 7. 16), 「安部政権支持率世界一 Japan as No 1 再び」, MIZUHO 리サーチ TODAY.

2. 선거 쟁점별 현안 분석

가. 성장전략

- 아베 정권은 일본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의 핵심정책으로 산업재생, 전략시장 육성, 대내외 투자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음.
- 동 성장전략에서는 에너지, 의료·건강, 농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강조하였고, 3대 도시권 중심의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하여 총리 주도의 대담한 규제개혁을 추진 중임.
 - 성장전략 중 조기 착수가 필요한 정책으로 기업 세제조치, 벤처 자금공급 확대, 국립위생연구소(일본판 NIH) 창설, 일반의약품 인터넷 판매 금지조치 완화, 농업생산법인 요건 완화, 전력시스템 개혁, 민간 파트너십에 의한 인프라 정비, TPP 등을 제시하였음.
- 그동안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 고용관련 규제완화, 혼합진료 허용 등의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정책 내용의 구체성과 기대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옴.

표 2. 아베정부의 성장전략과 정당별 선거 공약

아베 신정부의 성장전략	자민당 공명당 선거공약	주요 야당 선거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도 세제개정에서 연구개발 감세 확충 - 과학기술 예산배분을 분할방식에서 집중방식으로 전환 - 재생의료, 의료기기 관련 규제개혁 추진, 일반의약품 인터넷 판매규제 개정 - 종합특구창설 등을 포함한 성장전략을 각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감세 - 법인세 인하 실행 - 국내 입지기업의 부담경감 - 국내외 우수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연구생활환경 구축 - 특히 신속화 및 연구개발거점 유치 등 지재권 정책 - 집중지원 방식(Targeting Policy)에 의한 신산업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주당] GreenLife 농림수산물중 소기업 육성책을 제시, 노동규제 완화 대신 고용안정을 강조 [일본유신회] 법인세 감세, 재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다함께당] 법인세 20% 감세, 엔젤 투자 세제 우대등 투자환경 조성

자료: 日本總研(2013. 7. 4), 「2013年参議院を控えた主要政党の政策評価-主要5分野の政策-」, pp. 7~8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자민당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세 가지 플랜(일본산업부흥플랜, 전략시장창조플랜, 국제전개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신성장산업 육성, 고용창출 등에 집중할 것을 강조함.
- 자민당은 기업설비투자자에 대한 세금 및 법인세를 국제 수준으로 인하하여 기업부담 경감을 목표로 제시함.
- 향후 3년 내 설비투자 연간 70억 엔 달성, 2020년까지 외국인투자실적을 현재의 2배(35억 엔)로 확대할 것을 공약함.
- 연구인력 육성 및 연구환경 정비를 통한 민간 성장분야 창출, 창업 지원, 자원과 인재 집약 등의 목표를 제시함.
- 고용정책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실업기간 6개월 이상 인구 20% 축소 등의 지원조치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는 산업으로의 노동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함.

- 민주당은 비즈니스 환경개선을 강조하는 자민당과는 달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고용 안정을 달성할 것을 역설함.
-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술전수, 창업육성 지원체제 강화 등 중소기업 육성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움.
-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노동규제 완화정책에 반대하면서, 정규직 · 비정규직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를 균등하게 대우하고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피력함.
- 한편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 대부분의 당이 자민당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을 목표로 내세움.

나. 재정 및 사회보장개혁

- 재정건전화 개혁 논의는 매 선거마다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어 왔으나, 이번 선거에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장기적 운영목표만을 제시한 채 명확한 수치목표 및 기한 명시를 회피함.
- 자민당은 재정재건에 전념하겠다는 자세로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선거 공약에서는 소비세 증세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으로 삼는 것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음.
 - 중장기 목표로는 중앙·지방정부의 명목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5년도까지 2010년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도까지 흑자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함.
 - 2012년 가결된 소비세 인상안(2014년 4월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1차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동향을 주시하면서 올해 10월 중에 인상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힘.
- 민주당도 자민당과 공통된 중장기 재정운영목표를 제시하면서 세출 및 세입개혁에 착수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책임법’의 입법화를 주장함.
- 한편 다함께당, 공산당, 생활당, 사민당, 녹색바람당, 일본유신회 등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소비세 인상 동결 또는 중지를 요구함.
- 여 · 야는 모두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제도별 개혁의 구체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임.
- 일본은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등을 경험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금의료제도 개혁, 저출산문제 대응 등에 대한 제도개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
- 일본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11월 총리 직속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그간 16차례 국민회의(2013. 6.24일까지)를 거쳐 연금과 의료보험의 전면적 개편 작업을 진행하였음.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남성의 후생연금 수급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끌어올릴 계획임(3년마다 1년씩 연장, 여성은 5년 후부터 실시).
 - 의료보험은 고령자(70~74세)의 자기부담을 현재의 10%에서 현행법에서 지정한 20%까지 늘림.

표 3. 아베정부의 재정·사회보장 정책과 정당별 선거 공약

아베 신정부의 재정정책	자민당 · 공명당 선거공약	주요 야당 선거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 지방 정부의 명목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 2020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 	<p>[자민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건전화 방침은 아베 신정부 목표에 준함.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제안 - 국민회의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 재검토 - 소비세는 전액 사회보장재원으로 사용 <p>[공명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연금가산 확충, 피고용자연금 적용확대 - 고액의료비제도 재검토(자기부담 경감) - 세액공제제도 도입 	<p>[민주당] 공적연금제도 일원화, 최저보장연금 구축, 의료보수 확대, 의료보험 일원화, 연령별 차별 보험제도 폐지, 고액의료비제도 확충 및 환자부담 경감</p> <p>[일본유신회] 연금 적립방식 이행, 지급개시연령 단계적 상승, 소득기반 의료비자가부담비율 설정 등</p> <p>[다함께당] 연금 적립방식 검토, 고소득 고령자 연금지급감액 검토, 의료보험제도 단계별 일원화, 혼합진료 해금</p>

자료: みずほ総合研究所(2013. 7. 12), 「今後の社会保障制度改革を考える」, p. 6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자민당은 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해 “현행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국민회의 결과(8월 21일 최종보고 예정) 등을 토대로 검토를 실시” 한다고 밝혀 자체적인 개혁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우지 않음.
 - o 또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약 20만 명, 2017년도 말까지 약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대기아동 해결 가속화 플랜’ 을 제시함.
-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최저보장연금 창설 및 공적연금제도 일원화)와 의료제도(의료보험 일원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제도 폐지) 정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 사회보장과 관련된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자민당과 민주당 모두 소비세 인상액을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다. TPP 전략

- 아베 총리는 3월 15일 TPP 협상 참가를 공식 선언한 이래 작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 내건 6개 항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둬.²⁾
 - 일본정부는 TPP 정부대책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집권 자민당 역시 TPP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6개 항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협상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임.
 - o 아베 총리는 TPP 협상 추진 시 일본정부가 견지할 기본방향으로 ① 성역 없는 관세철폐 수용 불가, ② 공산품 수치목표 수용 불가, ③ 공적의료보험제도 사수, ④ 식료품 안전기준 사수, ⑤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ISD 조항 도입 반대, ⑥ 정부조달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적극적인 공세와 수세 병행의 여섯 가지 항목을 제시하였음.
 - 일본은 그동안 자국의 농산물 시장을 철저히 보호한 결과, 기체결 13개 FTA의 자유화 수준을 90% 미만으로 낮게 유지한바, TPP 협상에서도 이를 관철하는 것이 최대 목표임.

2) 김규판(2013. 4. 11),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12 참고.

- 일본 내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쌀(관세율: 778%), 유제품(360%), 설탕(328%), 밀(252%), 쇠고기(38.5%) 등 5개 품목군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함.

표 4. 아베 정부의 TPP 전략과 정당별 선거 공약

아베 신정부의 TPP 전략	자민당·공명당 선거공약	주요 야당 선거공약
- 3월 15일 TPP 협상 참가 결정	- TPP 참여 의사 명확화 - 농산물 시장 보호의지 피력	[민주당]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TPP 교섭 탈퇴도 불사 [일본유신회 · 다함께당] 정부의 TPP 참가확정 지지

자료: 日本總研(2013. 7. 4), 「2013年参议院を控えた主要政党の政策評価-主要5分野の政策」, p. 9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오는 7월 23일 TPP 협상 참여를 앞두고 자민당은 “지킬 것은 지키면서 공세를 병행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는 최선의 길을 추구한다” 라는 입장을 강조함.

- 자민당은 TPP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 일부 야당도 자민당의 TPP 협상 참여를 적극 지지함.
- 민주당은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지하면서도 쌀 등 농산물의 관세유지와 국민의료보험 유지를 요구함.
- 공산당, 생활당, 사민당, 녹색비람당은 일본 내 농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TPP 협상참여에 반대함.

■ TPP의 영향을 받게 될 농업정책에 대해 자민당은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반면, 민주당은 농가 호별 소득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힘.

- 자민당은 농가소득을 10년 내에 배가시키는 농업 진흥책인 ‘농가소득 배가 목표 10년 전략’ 을 바탕으로 농지 집적과 경작포기 토지를 활용하는 데 전념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방안은 결여되었다고 지적됨.
- 민주당은 식량 자급률 50%를 목표로 논밭 경작 농가에 대한 호별소득 보상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축산 · 낙농 소득보상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농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함.

라. 원전 재가동

■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모든 원전을 일단 가동 중지하고 한층 강화된 안전지침을 적용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으나, 연료비용부담 증가로 손실을 입은 전력회사들이 속속 원전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음.

-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2년 5월 일본 내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전면 가동 중단되는 원전 제로 체제에 들어감.
- 그 후 2012년 7월 간사이 전력은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오이 원전 3, 4호기를 가동 재개한 바 있으나 원전 가동률은 4%대에 그침.

-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 6월 원전사고 대책을 강화한 새로운 원전규제 기준을 결정함.
- 7월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한 원전 재가동 정부 심사가 시행 중임.
 - 현재 전력회사들은 원자로 10기에 대해 안전심사를 신청한 상태이나, 가동 재개를 위해서는 안전성 확인 후 해당 지역 지자체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재가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방침과 관련하여 자민당은 ‘재가동 찬성입장’ 을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2030년대 원전가동 제로 입장’ 을 유지함.
- 자민당은 “원전의 안전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맡기고, 재가동은 현지 지자체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라며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찬성하는 입장을 발표함.
 - 자민당은 유일하게 원전 재가동 방침에 찬성입장을 제시하였지만, 자민당 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원전 재가동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됨.³⁾
- 한편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인 ‘2030년대 원전 가동 제로’ 입장을 유지하였고,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은 안전성을 중시하며 원전 제로 방침을 표명함.
- 하지만 탈원전 이후 전력 수급방침 등에 관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됨.

3. 평가 및 전망

- 이번 선거는 예상대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중의원, 참의원에서 모두 제1당의 위치를 탈환하여 3년 동안 안정적인 정치기반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됨.
- 자민당의 압승 요인은 일본 국민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그동안 지속된 일본 내 정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이번 선거 결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다수당이 다른 상태가 해소되면서 향후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반이 성립됨.
- 제2기 아베 내각은 향후 3년간 국정 선거가 중의원 해산 이외에는 없다는 점에서 고이즈미 총리 이후 최초로 장기 집권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성장전략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대응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나, 재정정책과 TPP 전략 등 다른 정책현안 부문에서는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보다 대응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일본총합연구소(2013. 7. 4)는 이번 선거공약에서 정책의 수치 목표, 기한, 수단 및 재원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

3) 『아사히신문』 이 원자력발전소 재가동 방침에 대해 7월 13~14일 조사한 결과, 총 응답자 중 56%가 반대하였고, 2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됨.

■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상당한 구심점을 확보한 아베 정권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강한 실천력을 바탕으로 정책추진에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정책)** 아베 총리가 선거 후 “15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 탈피를 역사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전력을 다한다” 라고 강조함에 따라 일본 은행도 2014년까지 물가목표치 2% 달성을 전제로 강도 높은 금융완화 방침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본 정부의 강력한 엔저 정책에 힘입어 달러당 100~105엔대의 엔저 기조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성장전략)** 지난 6월에 발표된 성장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가 조속히 강구됨에 따라, 이번 성장전략의 실행 가능성은 과거 전략들에 비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세 가지 액션플랜을 적극 추진하면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성장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이후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 로 명명하고,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2차 성장전략’ 을 마련할 계획임.
 - 아베 총리는 과감한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안’ (가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요미우리신문 6월 10일자).
- **(재정건전화)** 재정건전화 논의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쟁점화되지는 않았지만, 일본경제 재생에 필수조건인 재정건전화 정책이 아베노믹스 제4탄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 일본정부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에 대한 기본방침’ (2013. 6. 14)을 통해 재정건전화 중장기 목표를 제시함.
 - ‘기본방침’ 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출의 중점화, 효율화의 기본적인 방침만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8월에 책정하는 ‘중기재정계획’ 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 미즈호총합연구소(2013. 7. 11)는 9월 5~6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보고할 예정인 ‘중기재정계획’ 도 해외 신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함.
- **(소비세율 인상)** 아베 총리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인 소비세 인상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된다면, 재정건전화에 대한 개혁의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일차적으로 2014년도 4월에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는 방침에 대한 결정시기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음.
 - 아베 총리는 현 시점에서 디플레이션 탈피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어, 이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을 연기할 가능성도 존재함.
 - 아베 총리는 그동안 소비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소비세 인상에 의한 세수 감소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왔음.
 - 이는 1997년 4월 소비세 인상 시점에서 일본 금융기관의 파산과 맞물려 2년간 세수가 오히려 6.7조 엔 감소했던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 미즈호총합연구소(2013. 7. 11)는 소비세율 인상시기가 연기된다면, 2014년에 조 엔 단위의 세수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국채에 대한 신임 저하로 금리가 상승하여 이자지불비용 증대를 초래할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⁴⁾
- **(TPP 전략)** 일본이 본격적으로 TPP 협상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는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한·중·일

4) 미즈ほ総合研究所(2013. 7. 11), 「参院選後の課題は「第四の矢」 「骨太の方針」.

FTA나 RCEP에 미치게 될 영향과 우리의 TPP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할 것임.

- 일본정부는 자민당의 참의원 선거 압승 직후인 7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TPP 협상에 처음으로 정식 참여할 예정임.
- 자민당 내에서도 농산물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주요 5개 품목군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중론자들을 중심으로 TPP 협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TPP 협상을 주도하는 아베 총리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주목됨. **KISP**